

# 북한 공업배치구조의 특징과 남북경제협력 방안

류학수 | 일본학술진흥회 | krj3427@gmail.com

## I. 들어가는 말

금년 남북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과 미래적 경제공동체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공업배치의 문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분단체제하에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공업배치를 구축해 왔다. 이것은 매우 특징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sup>

따라서 북한에 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북한 공업배치의 특징과 역사적 변천을 우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하겠다.

## 1. 북한 공업배치의 특징과 역사적 변천과정

북한 공업배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업배치는 북한 지도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현될 수 있었다. 북한 지도부가 공업배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부흥기부터이며, 그

1) 북한에 있어 공업배치는 공업부문 기업소를 각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배치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는 사업이며,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의 공업배치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 공업화 전략의 정책적 목표와 공업구조의 기초적 조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검토과제가 된다.

기본원칙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① 인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다양한 부문의 공업을 배치한다(균등원칙).
- ② 공장, 기업소를 원료·연료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근접시킨다(근접원칙).
- ③ 국방을 고려해 공업을 배치한다(국방원칙).

이 중 세 번째의 국방원칙은 한국전쟁 중 미군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반영되었다. 국방원칙의 목적은 공업 거점이 폭격당할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 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공업배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의 균등원칙과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공업기업의 배치원칙은 「근접원칙」과 「균등원칙」이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하면 일관되게 「균등원칙」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공표한 통계자료가 매우 적어, 개별 기업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공업기업 배치분석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데이터셋을 이용한 북한 공업배치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지리지전서(朝鮮地理全書)』에는 전국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업이 다수 게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기업 데이터셋 작성이 가능하다. 필자는 『조선지리지전서』에 기재된 기업을 전부 추출한 후, 이를 산업 부문별, 시·도 단위의 행정 구역별로 분류하여 총 4,457개 기업 레벨의 데이터셋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북한 기업배치의 균등성을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으로 표시하여 공업배치에서의 「균등원칙」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sup>2)</sup>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의 균등배치 경향은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대부터 관찰된다. 필자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해방 전 기업 수는 총 116개로 그 대부분이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평양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후 총 기업 수는 116개에서 334개까지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의 기업들은 전국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치되었다(표 1 참고).

균등배치 경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1950년대 기업 수는 총 1,532개까지 증가했으며, 금속공업 등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경공업 및 중공업 기업의 균등한 배치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후, 1960~80년대에 걸쳐 기업 수는 총 4,457개까지 증가하며 균등배치도 일관되게 진행되었지만, 그 진행 속도는 50년대와 비교해 완만하게

2) 이 실증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학수(柳學洙, 2018)를 참조.

나타난다(표 1 참조).

이러한 관측결과를 통해, 공업기업의 균등배치는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된 속도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기업의 균등배치 경향을 도식화한 로렌츠곡선의 추이를 표시한 것으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3,000개의 기업이 신설되었지만 그림과 같이 로렌츠곡선 형태의 극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즉, 북한 공업배치의 기본구조는 1950년대에 거의 완성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광업·중공업·경공업 별로 살펴봐도 동일하다. 각 부문별 차이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업배치는 전국에 다양한 부문의 기업을 설립하는 「균등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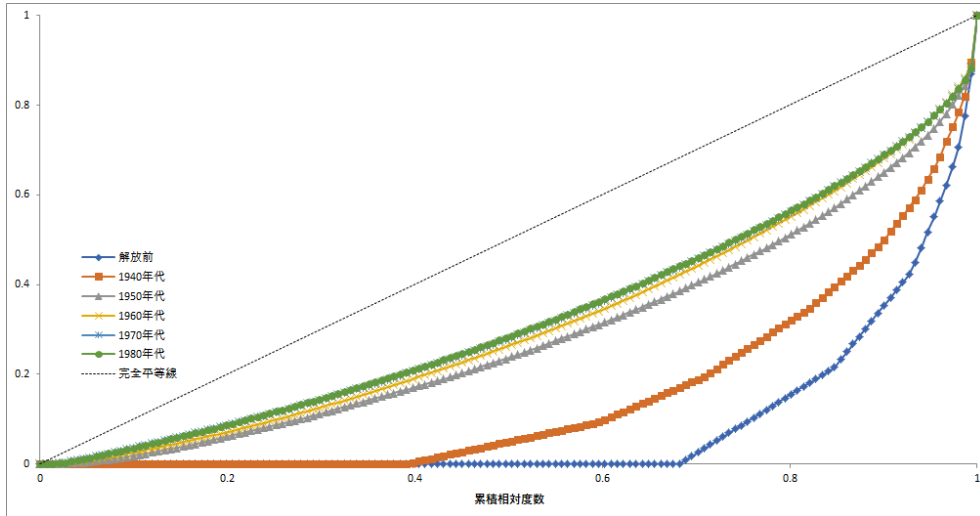
단, 모든 분야에서 균등화의 흐름이 동일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광업과 중공업 부문 내 「1차 금속산업」, 「전력공업」 및 「수송기계」 등에서는 기업배치의 지역적 편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1차 금속산업」 부문은 1980년대까지 지니계수가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생산활동에 있어 수송비용이 높은 특성을 지닌 금속산업 등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료생산지에의 근접 배치, 즉 근접원칙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1〉 공업부문별 기업 수 및 균등배치경향(지니계수)의 역사적 변천과정

|      |       | 공업부문 |      |        |          |           |      |      |      |            | 기타     |         |          |          |        |
|------|-------|------|------|--------|----------|-----------|------|------|------|------------|--------|---------|----------|----------|--------|
|      |       | 전체   | 광업   | 중공업 전체 | 1차 금속 산업 | 조립금속 기계장비 | 수송기계 | 화학   | 전력공업 | 시멘트 유리 도자기 | 경공업 전체 | 음식료품 담배 | 목재 펄프 종이 | 섬유 의복 신발 | 가구 잡제품 |
| 해방전  | 지니계수  | 0.82 | 0.88 | 0.89   | 0.97     | 0.97      | 0.98 | 0.94 | 0.96 | 0.95       | 0.92   | 0.93    | 0.98     | 0.97     | 0.99   |
|      | 누계기업수 | 116  | 38   | 46     | 6        | 6         | 5    | 11   | 6    | 12         | 32     | 24      | 3        | 4        | 1      |
| 40년대 | 지니계수  | 0.68 | 0.82 | 0.82   | 0.96     | 0.88      | 0.95 | 0.94 | 0.96 | 0.91       | 0.75   | 0.79    | 0.93     | 0.92     | 0.88   |
|      | 누계기업수 | 334  | 51   | 112    | 7        | 39        | 11   | 20   | 6    | 29         | 171    | 109     | 13       | 24       | 25     |
| 50년대 | 지니계수  | 0.42 | 0.79 | 0.59   | 0.95     | 0.59      | 0.92 | 0.82 | 0.94 | 0.68       | 0.36   | 0.43    | 0.52     | 0.44     | 0.49   |
|      | 누계기업수 | 1532 | 88   | 533    | 15       | 249       | 22   | 86   | 11   | 150        | 911    | 361     | 122      | 251      | 177    |
| 60년대 | 지니계수  | 0.37 | 0.73 | 0.49   | 0.94     | 0.52      | 0.88 | 0.63 | 0.92 | 0.55       | 0.32   | 0.43    | 0.46     | 0.37     | 0.39   |
|      | 누계기업수 | 2806 | 146  | 1093   | 26       | 546       | 36   | 193  | 19   | 273        | 1567   | 595     | 167      | 474      | 331    |
| 70년대 | 지니계수  | 0.35 | 0.68 | 0.42   | 0.93     | 0.47      | 0.85 | 0.42 | 0.88 | 0.44       | 0.31   | 0.38    | 0.38     | 0.37     | 0.4    |
|      | 누계기업수 | 4142 | 199  | 1734   | 39       | 770       | 59   | 420  | 28   | 418        | 2209   | 858     | 215      | 660      | 476    |
| 80년대 | 지니계수  | 0.34 | 0.66 | 0.42   | 0.92     | 0.47      | 0.83 | 0.41 | 0.87 | 0.43       | 0.31   | 0.37    | 0.37     | 0.37     | 0.4    |
|      | 누계기업수 | 4457 | 230  | 1889   | 42       | 810       | 65   | 469  | 31   | 472        | 2338   | 912     | 225      | 688      | 513    |

자료: 필자 작성.

[그림 1] 해방 전~1980년대에 걸친 로렌츠곡선의 추이



出所: 筆者作成

한편, 「조립금속·기계장비」, 「시멘트·유리·도자기」, 「화학」과 같이 중공업 중에서도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는 부문과 소비자의 생활에 직결되는 경공업 부문에서는 균등배치가 크게 진전됐다. 그 배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각 지역의 공업을 다방면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에 더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순환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북한 지도부는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경공업 및 생활용품 부문의 공업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독립적 경제사이클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공업 부문의 대기업은 생산활동에 편리한 특정 거점에 배치하여 투자를 집중시켜 집권적으로 관리하는 공업배치 전략을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경공업·일용공업 부문에 속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적 관리가 아닌 지방행정기관을 주체로 관리·운영이 되었을 것이다.

김일성 정권 시기에 형성된 경공업 및 일용중공업의 분산배치에 따른 지역 단위에서의 독립적 경제구조는 기업의 최적입지와 생산설비 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Scale Merit)를 경시하고 있다. 북한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을

3) 실제로 식품 공장, 간장 공장, 의류 공장, 철계 일용품 공장, 수지 일용품 공장 등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업기업은 거의 모든 행정 구역에 배치되어 있다.

수 있으나, 순수하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공업배치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한 공업배치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의 시기에서도 지속·유지되어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 중인 경제개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 2.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난과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면서 북한은 그동안 우호적 조건으로 무역을 해왔던 사회주의 시장을 상실함과 동시에,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로 무역결제를 해야만 했다. 또한 소련과의 무역액이 급감하고 원유 수입도 중단되며 생산시설 가동에 지장이 초래된 상황에 더해, 1995년에는 대규모 수해가 잇따라 대기근과 함께 심각한 경제난이 발생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1996년 1월부터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비상동원 체제에의 돌입을 선언하고, 발전소 복구작업과 농업용지의 정리, 감자재배 확대 등의 경제복구사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1998년 전후부터는 생산기관이 재가동되기 시작해 2000년에는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했다.

2000년대의 북한경제는 기본적으로 약한 회복기조가 지속되며 식량생산도 점차 호전되어 갔지만, 사회주의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큰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확대이다. 북한에서는 협동농장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물건을 시장가격에 맞춰 거래하는 농민시장을 비국영 유통망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북한주민이 생계를 위해 기존 농민시장에서 활발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이 상설화 되고 기업 간 물자교류 등에까지도 확대되어 갔다. 시장경제의 침투와 그에 따른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를 경계한 북한 당국은 2005년경부터 시장통제를 시도했으나, 냉전시대와 같은 엄격한 통제하에 둘 수는 없었다. 시장을 통한 거래는 북한 경제사회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4)</sup>

한편,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에서의 탈피를 가능케 한 공업생산의 회복이 외부에서의 전폭적 지원이 아닌,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구축된 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확대된 시장경제와 중국과의 경제관계 심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1950~80년대에 걸쳐 형성된 북한 공업의

4) 「고난의 행군」 시대의 복구 전략과 이후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나카가와(中川, 2011) 제3장 및 미무라(三村, 2017) 제5장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기본적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 역시 기존의 북한공업구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의 개혁정책 중 특히 공업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2013년 전면적으로 실시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불리는 경제관리방법이다. 이 기업책임관리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영기업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여 경영활동의 효율화·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에 부여된 권한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의 부여이다. 이를 통해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 도입된 공업 부문의 경제개혁은 기업책임관리제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주문 계약제」 형태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기업들끼리 생산활동에 필요한 거래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계획경제시스템을 채택한 북한에서의 지금까지 기업 간 거래는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래를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활동 모든 분야에서 주문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회과학원의 연구자에 따르면<sup>5)</sup> 현재 계획지표로는 「국가 지표」와 「기업소 지표」 두 종류가 있다. 국가 지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시하는 목표에 따라 생산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기업소 지표에 대해서는 주문 계약제와 기업 간 독자적 거래로 자재를 확보해 생산한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산정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국가 지표와 기업소 지표의 배분에는 산업부문별로 차이가 있어 중공업 부문의 대기업은 생산활동의 70% 이상을 국가 지표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경공업 부문의 중소기업은 생산활동의 대부분을 기업소 지표에 따라 주문 계약제를 활용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즉, 기간산업인 중공업 부문은 기존대로 국가가 장악해 운영하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경공업 부문에서는 독자의 재량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하여, 이를 통해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공업분야에서 추진되는 경제개혁의 목표이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개혁은 중공업 부문의 대기업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공업·일용중공업 부문은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독립적 경제순환 구축을 목표로 한 공업배치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에 형성된 공업기반의 역사적 축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류학수(柳學洙, 2016)를 참조.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기 모두, 지금까지 구축된 공업구조를 유지하며 그 기반을 기초로 경제를 운영해 왔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공업 기업을 생산거점으로 배치하여 집권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공업 기업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공업배치는 경제개발과 국방의 기본 전략으로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된 구조이다. 만일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공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공업구조를 염두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3. 북한지방경제의 브랜딩 전략과 남북경제협력 방안

200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연결사업 일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이 지정한 일정 범위 내 지역에 한국이 투자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침투를 경계하는 북한에 있어 허용이 어렵지 않았다.

또한 철도를 시작으로 한 교통인프라 연결 및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으로서는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과 한반도를 육로로 연결 가능하며 북한으로서는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 이점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에 진행된 경제협력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대에 중단되었으나, 금년에 시작된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이 진행되면 위와 같이 남북 모두에 합의가 용이한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철도연결사업 관련 조사는 이미 착수됐다. 또한 2013년 5월 북한의 경제개발법 채택으로 북한 전역에 경제 개발구가 설치됨에 따라, 개성공단 외의 더 많은 지역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관광사업 진흥에도 힘을 쏟고 있어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뿐만 아니라 원산 등 관광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지 모른다.

이런 종류의 경제협력사업은 이미 전례가 있으며, 남북 모두의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이 갖춰지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착수가 용이한 프로젝트만 지속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중 하나는 북한이 허용한 개발구와 관광지에서의 프로젝트만 수행할 경우, 한국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북에 대한 남쪽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높아져, 경제협력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요인에 따라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자체가 좌우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자국의 문호를 활짝 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자본주의 세계로의 전면적 개방을 허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설사 북한 지도부가 전면적 개방을 결단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이 본고에서 재차 언급한 북한 공업배치의 문제이다. 앞서 본 것처럼 북한공업기업은 시장의 경쟁과 도태에 상관없이 매우 인위적인 배치를 통해 생산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및 산업입지의 효율성과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공업구조를 한국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형태로 재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하며 재정적, 정치적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방치하고 성장이 예상되는 북한의 개발지역에만 투자를 집중하면 북한 내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북한주민이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상의 이유로 북한의 경제사회를 급속히 한국의 자유자본주의 경제에 통합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 모두의 합의가 용이한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면서, 지방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발전을 전망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남북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비전은 매우 광범위한 이야기이므로, 본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로 북한의 독특한 경제구조를 전제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여 「새로운 개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환경(ecology)」, 「지방 생산품을 지방에서 소비하는 순환형 경제」, 「지방의 원재료를 활용한 슬로푸드」, 「대규모 자본 주도가 아닌,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부흥」 등의 긍정적이면서 선진국의 풍조가 반영된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업배치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개발에 의문을 던지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기계화와 대량생산이 아닌 지역 원재료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해 온 북한의 지역 공업을 위와 같은 이미지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새로운 지속가능한 경제모델

6) 시장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 가능성을 시험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브랜딩하는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와 사회적 기업가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매칭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다. 「새로운 개발 모델」 실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먼저 남북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현황과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개발 계획과 모델 케이스 몇 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이러한 정보와 개발계획을 일반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며 국내외에서 「새로운 개발 모델」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북한 개발수용지역과 매칭시키는 단계에 들어간다. 실제로 매칭이 성공해 일부 성과가 나타나면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북한 지방경제개발 모델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어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지역경제의 긍정적 가능성과 이미지 강조만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미지 전략에 성공한다고 해도 지방 공업의 노후화된 시설과 낙후된 기술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순환형 경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 거의 모든 곳에 간장 공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sup>7)</sup> 「친환경(ecology)」과 「순환형 경제」,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부흥 슬로건을 현실화하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공업기반을 적잖이 정리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모델」로서 북한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지방 공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움직임도 생길 것이다. 그렇게 북한의 지방 부흥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다면, 이는 한국 국민이 북한의 독특한 경제시스템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미래적 경제통합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북한경제구조의 독자성을 살린다”라는 생각은 북한 지도부에도 어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북한의 공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방 부흥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지역 공업배치의 재구축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이 그동안 쌓아온 공업구조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 독자성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북한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7) 주3)에서 언급했지만, 북한은 기업의 입지조건을 불문하고 행정구역 거의 모든 곳에 간장 공장을 배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북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착실하면서도 균형 잡힌 장기적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여기에 상호이해와 신뢰관계가 깊어지면 정치적 움직임에도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에 더욱 나은 환경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북한도 착실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 책임관리제와 주문계약제가 전국의 기업에서 확대 실시되면서 경쟁과 도태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새로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모델」이라는 발전 비전을 애초 북한이 원할까 하는 문제도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파악과 남북 양측의 경제협력비전에 관한 의견 조율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참고문헌

- 나카가와 마사히코(中川雅彦, 2011), 「조선사회주의경제의 이상과 현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산업구조와 경제관리(朝鮮社會主義經濟の理想と現実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における産業構造と經濟管理)」, 아시아경제연구소.
-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2017), 「현대조선경제 - 좌절과 재생에 발걸음(現代朝鮮經濟 - 挫折と再生への歩み)」, 일본평론사.
- 류학수(柳学洙, 2016),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해석한다(金正恩時代の「朝鮮式經濟管理方法」を読み解く)」, 아시아연구월드트랜드 No.243.
- 류학수(柳学洙,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업배치정책 - 기업레벨데이터를 이용한 균등배치원칙의 실증적검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工業配置政策 - 企業レベルデータを用いた均等配置原則の実証的検証)」, 아시아경제, 제59권 제2호.